

복지 사각지대 대책 점검을 위한 복지부-지자체(17개 시도) 간담회 개최

- 복지부와 17개 시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
- 복지부, 지자체에 적극적인 취약계층 발굴·지원 당부 -
- 복지부, 지자체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취약계층 발굴을 책임지는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화) 오후 4시에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입수 위기정보 확대(34종→39종, '22.11), 비상시 통신사 연락처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 급여법 개정('23.3)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 공무원 교육 강화, 보직 관리 체계화, 인력증원 및 복지 수요를 반영한 직제 개편 등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에 위기가구 상담 시 긴급복지 등 공적 급여 신청 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더불어, 업무량과 보직 이력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 고유의 사회복지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 등 지자체별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기존 양식 보도 참고자료
2.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22.11.24)
 3.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추진 현황
 4. 사회복지 공무원 실태조사 및 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 주요 내용
 5.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 개요

담당 부서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노정훈 (044-202-3120)
		담당자	사무관	한두희 (044-202-3123)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화) 오후 4시에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 ▲ 취약계층 발굴을 담당하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개최되었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 >

- 정부는 2022년 11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위기가구의 정확한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개선대책에 따라,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입수 위기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22.11)하였고, 복지등기 시범사업 확대, 민간 위기가구 발굴 업무 대상자 교육 등 민관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신속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통신사 연락처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 급여법을 개정('23.3)하고,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 입수를 확대(39종→44종)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23.3, 입법예고 완료) 중에 있으며, 경찰소방 협력을 통한 비상 개문 지침을 마련('23.1)하고 복지멤버십 안내 대상 사업을 76종에서 80종으로 확대('23.2) 하였다.
-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 상담 시 긴급복지 등 공적 급여 신청 안내, 민간자원 연계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 환경 개선 >

-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연구에 포함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는 전국 시군구(229개) 및 읍면동(3,508개) 복지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주요 결과 >

- **[인력]** 2021년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41,211명으로 2017년 35,116명 대비 6,095명 (17.4%) 증가
- **[승진]** 시군구 사회복지직의 평균 승진 소요 연수*는 행정직에 비해 0.2~1.7년 더 긴 수준으로 직급이 높을수록 격차는 커지는 경향
※ (사회복지직/행정직) 9→8급 2.4/2.2년, 8→7급 4.1/3.4년, 7→6급 8.5/7.4년, 6→5급 12.2/10.5년
- **[교육]** 교육·훈련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시군구 50.6%, 읍면동 61.7%
- **[소진]**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응답자의 70% 이상 직무로 인한 소진 경험

- 연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은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 공무원 교육 강화, 보직 관리 체계화, 인력증원 및 복지 수요를 반영한 직제 개편 등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최일선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밝히면서,
-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에 업무량, 보직 이력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 고유의 사회복지업무(찾아가는 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복지급여 신청 등)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 등 각 지자체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환경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교육 훈련 강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등 복지 부서에 사회복지직 우선 배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업무 지원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 교육 신규 수행('23년~) 및 읍면동장,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등 복지 부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시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표 배점 강화 등 추진

** 민간 위기가구 발굴 업무 대상자 교육('23.3월~), 위기가구 발굴 매뉴얼 개발·배포 등

○ 사회복지인력 충원 현황 및 운영실태, 수행체계 점검 등을 통한 인력 효율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 추진 배경

□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 사례* 발생

*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22.8.21) 질병·채무로 생활고, 지자체의 가정방문 시 주민 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 연락처가 없어 상담·지원 불가

□ 고독사, 취약청년* 등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필요성 증가

*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 경제·인구·사회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복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2 추진 방향

목표

모두가 행복한, 출중한 사회안전망 구축

전략

- ◆ 정확한 발굴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 ◆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적극 지원

추진 과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 ▶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및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
- ▶ 지자체 인력운용 개선 및 발굴역량 강화
- ▶ 지역 기반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 ▶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 ▶ 위기가구 연락처 정보연계 및 신속한 소재 파악
- ▶ 복지멤버십 및 민간기관 신청지원 확대로 위기가구 예방
-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 ▶ 발굴 후 공공-민간자원 연계 강화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 ▶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
-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전·후 자립지원 강화
- ▶ 新 취약청년(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체계 마련
- ▶ 청년 지원정책 정보 통합 제공 및 정책 소통 강화

1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 **(발굴시스템 고도화)** 위기정보 입수 확대(34→39종*, '22.11), 세대단위 발굴모형 개발 및 지자체 맞춤형 발굴 환경** 제공('22.12)
 - *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장기요양등급, ③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
 -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적정보, 위기정보 조건을 검색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
- **(민관협력 강화)** 의료사회복지사 등 민간인력 활용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23.1~), 복지등기 시범사업* 수행(8개 시군구, '22.7~)
 - * 집배원이 복지등기를 배달하면서 위기가구의 상황을 파악(우정사업본부)

2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 **(신속한 소재 파악)** 비상시 연락처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3.2), 비상시 경찰·소방 협조를 받아 개문할 수 있는 근거 마련('23.1)
 - *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통신사에 위기가구의 연락처를 요청, 제공 받기 위한 근거 마련
 -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연락두절 위기가구 조사 실시('22.10~12)
- **(신청 편의 지원)** 복지멤버십 안내 대상 사업 확대(76종→80종, '23.2),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운영(34개 민간기관, 7종 서비스, '23.1~)
- **(기초생활 보장성 강화)** 기준중위소득 인상(4인 5.47%, '23.1), 재산 기준 개선 및 기본재산공제액 상향('23.1), 긴급복지 생계급여 인상('23.1)
- **(자원 연계 강화)** 자립지원을 위한 근로능력평가 간소화('22.12), 금융위기 자살고위험군 연계(신용회복위원회-자살예방센터 13개 시도, '23.1)

3 신[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고독사 예방)** 고독사 실태조사('17~'21) 결과 발표('22.12), 9개 시도 (39개 시군구)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시행('22.8~'23.12)
 - * 지역 특성에 따라 ①안부확인형, ②생활지원형, ③심리지원형, ④사전·사후관리형 모형
- **(취약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22.11.17), 자립수당 인상*(월35만→40만원, '23.1월~), 전담인력 확충(120→180명, '23.3)
 - * ▲경제지원(자립수당·자립정착금 인상), ▲의료비 지원(신규), ▲전담인력확충, ▲보호 연장아동 지원확대(생계급여 개인지급 등), ▲정보플랫폼, 콜센터 및 민간협력 강화 등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 개요 >

- (과제명)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
-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기간/ 대상) '22. 7~12월, 전국 시군구(229개) 및 읍면동(3,508개) 복지 담당 팀
- (조사방식) 통계 분석, 웹기반 조사표를 활용한 팀 단위 자기 기입식 직무 실태조사
- (연구내용) ▲ 사회복지 직제·인력 현황 분석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직무실태 조사
▲ 조직개편 모형 설계, 직무량 분석 등 제도개선사항 도출 등

1 사회복지 직제·인력 현황

- (인력)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기타 직렬) 증가 ('17) 35,116명 → ('21) 41,211명 (6,095명, 17.4% 증)
- 복지대상자*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증가 ('17) 323명 → ('21) 341명 (18명, 5.6% 증)
※ 시군구 복지대상자: ('17) 1,136만명 → ('21) 1,405만명 (23.7% 증)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 ('17) 29.9만명 → ('21) 134만명 (347% 증)
- (승진) 시군구 사회복지직의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행정직 대비 약 0.2~1.7년 더 소요, 직급이 높을수록 격차는 커지는 경향
* (사회복지직/행정직) 9→8급 2.4/2.2년, 8→7급 4.1/3.4년, 7→6급 8.5/7.4년, 6→5급 12.2/10.5년
- (보직) 시군구 및 읍면동 복지부서의 과장·팀장(5, 6급)을 사회복지직으로 배정(단수)한 경우는 0.1~21.1% 수준

2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직무 실태

- (인력 배치 적절성) 복지관련 업무 수행 시, 사회복지직 배치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시군구 37.5%, 읍면동 57.5%

- (교육·훈련지원 충분성) △(시군구) 5점 만점 2.4점,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 50.6%, △(읍면동) 2.2점,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 61.7%
- (폭력 경험) 최근 2년간 근무 중 언어폭력(86.5%), 성희롱(31.8%), 신체적 폭력(14.9%)을 경험
- (직무 소진 경험) 응답자의 70% 이상 직무소진 경험, 시군구(77.7%)와 읍면동(79.8%) 간 차이는 미비
- (민간 인적 안전망 활성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사 등 민간 인적 자원 활성화 필요성에 46.5% 동의(5점 만점 3.3점)

3 지자체 전달체계 강화방안(안) [연구진 제시]

- (법·제도)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운영 기준* 등 근거 마련 및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조사·통계관리, 진단·분석 정례화
 - *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의 정의, 효율적 운영 의무, 별도 조직·인력 기준, 관리방안 등
- (인력·인사) 적정 직무 시간과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한 기초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증원*, 민간 인적 안전망 활성화, 교육훈련 제도화 등
 - * (연구진 추계방법) 지자체 자체 설문조사 바탕으로 현재 직무량 산정 → 적정 직무시간, 및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인력규모 산정 → 총원 필요 규모 산정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 체계화*
 - * 복지관련부서 팀장급 이상 전담공무원 배치, 사회복지직 필수직위제 도입 등
- (직제) 시군구 복지 직제 설치 기준 마련 및 조직 모형 가이드라인 제시
 - 기초지자체 복지행정 조직은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복지대상자 규모에 따라 시군구 내 탄력적 편성
 - * ▲정책 총괄 및 조정,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집행 및 관리, ▲이용자 지원 및 관리 등

□ **간담회 개요** * **영상회의**

- (목적)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책 추진현황 및 사회복지 공무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중앙과 시·도 간 협력방안 논의
- (일시) '23.3.28.(화), 16:00~17:00
- (장소) 세종청사(본관 704호 영상회의실) ⇔ 시·도 영상회의
- (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주재)
 -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장
 -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장, 스마트안전기획팀장
 -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총괄 국장 (복지정책국장 등)

<간담회 세부 일정>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6:00~16:05 ('5)	■ 개회 및 인사 말씀	•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6:05~16:30 ('25)	■ 안건 발표	• 복지부 지역복지과장
16:30~16:55 ('25)	■ 지자체 의견 수렴	• 참석자 전원
16:55~17:00 ('5)	■ 폐회 및 마무리 말씀	•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